

농산업정책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효율적인 R&D 투자·지원, 기술기반농업 창출로 안정적 소득보장하고
우리 농산물 '품질혁신, 가격경쟁력' 확보 위한 일관된 정책기조 유지해야

WTO 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업이 시장개방의 파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국익차원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업분야가 저야할 짐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산업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불균형 성장론에 입각한 산업화 추진전략으로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남겨졌다. 본격적인 개방화가 시작된 1990년대에 이르러 농정의 전환이 요청되었으며, 농업분야가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UR협상을 계기로 농업분야가 경쟁의 소용돌이에 내몰리면서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시련이 다가왔다. 이렇게 농업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이규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42조를 투자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진행시켰으며 15조 농특세 재원을 마련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선진 농업국과 비교하여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농업인이나 농산업체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나름

대로 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출농업으로의 활로 개척이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당수의 농산물이 일본의 수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농정의 기조는 변함없이 생산기반의 선진화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다. 아울러 농가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가격보전 정책으로 직접직불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부

2006 일본수입시장에서 한국농산물 점유율

구 분	고추피망	가 지	오 이	배	백 합	파프리카	수 박
일본수입시장규모 (달러)	4만9900	4만800	3만1200	2만1200	12만8300	228만300	7400
한국산규모 (달러)	4만9900	4만800	3만1200	2만1200	11만8800	145만7000	4300
한국산비중(%)	100	100	100	100	92.6	63.9	58.1

인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상치유적인 정책만으로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한·미 FTA를 비롯한 서구 농업선진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계속 추진되는 한 수입 농산물과의 첨예한 대립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농산업 큰 역할 위해 산업계·국민동의 중요

앞으로의 농업이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이 융합된 종합생명 6차 산업이라고들 말하고 있지만 산업으로서의 농업계의 현실을 보면 인식적 차원이나 정책적 차원에서 그 실체를 찾기 어렵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타 산업 분야에서는 농산업분야를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하청 기능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농산업과 분야가 중복될 수 있는 부처에서는 이미 농산업 관련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성장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선점하고 있는 측면도 많다. 과기부와 생명공학/신물질 관련산업, 식품의약품

전청과의 식품산업 관리문제, 환경부와 축산물 폐수처리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산업의 원천이 농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계는 스스로 농산업이 타산업의 하청기지로써 전략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진입장벽이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이는 농산업 내부의 문제 뿐 만 아니라 타산업 부처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농산업분야가 제자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즉, 농업경쟁력을 위한 농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혼란 속에서 역할정립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산업의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는 EU 출범 후 동유럽의 저가농산물 유입, 광우병 파동,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 강화와 정부보조금 철폐 등 오늘날 한국의 농업분야가 직면한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하였다. 이때 네덜란드 당국은 '3P 정책 : 이익(Profit), 인류(People), 지구(Planet)'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산물의 고품질화 산업구조로 개편하는 등 혁신을 서둘렀다. 즉, 농산업도 시

장논리에 맞춰 수익성을 극대화 하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코자 하는 경제적 논리를 최대한 강조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농림 분야 조직체계를 우리나라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합한 개념인 '농업자연관리부'를 운영하여 농산업을 국가 경제의 한축으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네덜란드 농업당국의 막강한 파워에서 비롯될 수 있는 정책이며 조직체계지만 이는 산업계 구성원 및 대다수의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나온 결실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R&D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 모색

지식기반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지식의 원천이며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연구·개발(R&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농업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다국적 기업 및 선진 농업국에서 종자·품종을 독점하고 기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즉 농업부문에서도 기술자체가 치열한 국제경쟁의 수단이자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R&D 투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정부도 세계적인 농업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21세기 개방화시대의 농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R&D 투자와 기술혁신 전략을 모색해 왔다. 대표적으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94년부터 06까지 5,083 억원을 연구개발부문에 전략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UR 체결, WTO·DDA협상, 한·칠레 FTA 및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의 결과에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부분이 농업전반, 특히 농산업분야였지만 농산업을 타 분야의 산업부문과 대등한 위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부 및 농업계 전반에 걸친 R&D 투자·지원 및 자구노력은 미흡하였다. 이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된다.

획기적인 기술개발 없이는 세계를 상대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효율적인 R&D를 통해 기술기반농업을 창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에 있어 국가의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국가연구기관과 민간부문(농업인, 농산업체)의 상호보완과 협력이다. 진정한 상호보완과 협력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민간부문의 연구영역을 구분하고, 국가가 연구한 기초과학적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접근하여 국가연구기관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와 미래의 활용을 위한 기초분야를 장기적인 계획하에 사명지향적 연구를 하고 돈이 되는 연구 등은 민간의 몫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기관의 모든 연구결과를 납세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는 국가연구기관의 존재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한 차원 높게 할 것이다.

미래 농업 위한 거시적 안목 필요

농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농산업계 종사자와 농업인이다. 발전 속도가 더디고 급격한 국부의 창출도 기대할 수 없는 농업분야의 성격으로 전통적인 농과대학은 사라지고 농업생명과학대학 등으로 학문적 관심도 변화되고 있다. 이제 농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대학명칭과 학과명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이미 많은 농업 전문분야가 일반산업에 종속된 세부분야로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농과계 대학 졸업자가 농업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5%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업경영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기회까지도 타 산업 전

문가에게 많이 잠식당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교육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농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없는 암울함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교육을 교육이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농산업 후계자 양성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여긴다면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대학 및 농산업체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농산업 R&D의 중요성을 부각했던 바와 같이 농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용화·산업화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대학, 농산업체 등)하면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재는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농업을 위한 농정은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다. 한 축은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정책방향이며, 다른 한 축은 우리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농산물을 자원으로 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이 품질혁신, 가격경쟁력 확보, 농산업 유지 및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창조적 연구와 노력, 농정 관련 조직의 효율화,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토대로 한 일관된 농산업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농산업 혁신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Y